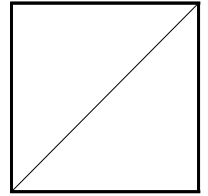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36 호
의 결 연 월 일	2020. 7. 8. (제 13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하이투자증권(주)에 대한  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7. 8.

## 1. 의결주문

하이투자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하이투자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‘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’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도과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어 다른 위규사항과 분리하여 먼저 조치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‘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’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자본시장법’이라 함)」 제449조에 따라 하이투자증권(주)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(붙임)

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7호

「(구)자본시장법(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)」 제449조 제1항 제29호
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5항 제14호 및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22]

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1항 제12호 나목

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3항, [별표3]

## 다. 제재내용 공개안

- ※ 금번 제재내용은 향후 부문검사 결과 처리시 여타 제재내용과 함께 공개할 예정

## 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6.25.) 심의필
-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(2020.7.1.) 심의필

## <별지>

하이투자증권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# 1. 조치내용

#### 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하이투자증권(주) : 과태료 27.5백만원 부과\*

\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 :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「(구)자본시장법」 제449조 제1항 제2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제390조, [별표22]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 제1항 제12호 나목,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, 제3항, [별표3]

### 2. 조치사유

#### 가.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

- ☐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14호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 제1항 제12호 나목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
- 하이투자증권(주) 과장 △△△는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인 이OO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015.8.19. “현재 보유주식(□□□자산관리)을 2015.10.31.까지 1만원 이상에서 매도시 3천만원을 수익보상금으로 처리하여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, 주가가 1만원 이하 시에는 2015.10.31.까지 원금 3천만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”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및 송부하여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\*한 사실이 있음

\* △△△는 2015.8.26. 이OO로부터 3천만원을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으나, 2015.10.31.까지 보유주식을 1만원 이상에서 매도하지 못하여 실제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였음

(붙임)

## 관계 법규

#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1. ~ 6. 생략
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### **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생략**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**별표 1**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면직
2. 6개월 이내의 정직
3. 감봉
4. 견책
5. 경고
6. 주의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### ③ 생략

**제449조(과태료) ①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□ 구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~④ 생략

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4.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2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2.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3항제5호	5,000만원

□ 금융투자업규정

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~11. 생략

12.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
가. 생략

나.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(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 절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)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

## 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###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

-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## 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<별표3> 과태료부과기준

### 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한다.

#### 가. 가중 사유

- (1)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%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

**제17조(과태료의 부과)**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**제19조(과태료 부과와 제척기간)**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**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**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와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
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**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015